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6. 19.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5. 2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5. 5. 23.

다. 상정일자: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5. 6.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위원 회피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위원회 존속 기한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관리상 효율성 증대 및 성별 관련 근거 법규 구체화
(안 제9조)
- 위원의 회피규정 의무화(안 제11조)

-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한 구의회 보고 명문화
(안 제14조)
- 위원회 존속기한 명문화(안 제1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 권익위의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감사담당관- 7898(2024. 8. 7.)호
 - 입법예고: 2025. 4. 17.~5. 7. (제출된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위원 회피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위원회 존속 기한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

① 조례의 개정 취지

- 위원회 관리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 회피 규정 의무화를 통해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구의회 보고 및 위원 존속기한 명문화를 통한 위원회 관리 강화를 위함.

② 주요 개정내용

- 위원 위촉 절차 정비 (제9조 제3항 신설)
 - 위원회 담당 부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장과 사전 협의 하고, 위촉 후 명단을 총괄부서에 통보토록 의무화
- 위촉 한도 표현 정비 (제9조 제4항)
 - “같은 사람이” → “위원 1명당”으로 수정
- 양성평등 관련 표현 정비 (제9조 제5항)
 - “경우에는” →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로 수정
- 회피 의무 명문화 (제11조 제3항)
 - “회피할 수 있다” → “회피하여야 한다”로 수정
- 운영현황 보고의무 신설 (제14조 제3항)
 - 구청장이 운영현황을 정리하여 매년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
- 존속 기한 명시 조항 신설 (제15조 제1항, 제2항 신설)
 - 위원회 설치 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설정토록 하고, 예외는 법령에 따른 경우로 제한

③ 개정내용 검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체계성·투명성 제고, 위원 중복위촉 방지 및 회피제도 강화로 공정성 확보, 구의회에 대한 책임 있는 운영 결과 보고체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권익위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마포구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행정적 일관성과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